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장
khkoo@kiep.go.kr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hhkim@kiep.go.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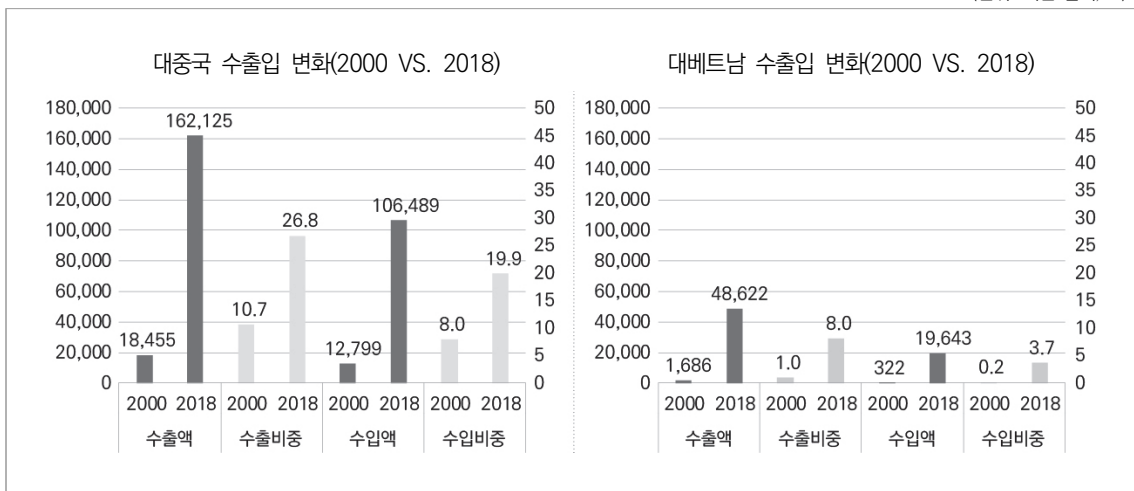
- ▶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대중국·베트남 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음.
- ▶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이 심화된 국내 산업 및 직종의 고용은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국과 베트남으로의 수출기회가 확대된 산업 및 직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수입경쟁으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보임.
 - 아울러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에 노출된 산업은 전체 고용규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고용은 상대적으로 줄고 저기술 생산직과 경영 관련 사무직에 대한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직종별 고용 구성을 변화시켜온 것으로 나타남.
- ▶ 대중국·베트남 무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구조의 재편은 제조업 종사자간 소득 및 고용 안정성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으며 그 효과의 크기는 근로자의 직종과 학력,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에 크게 노출된 산업의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 증가율과 고용안정성을 경험한 반면, 대중국·베트남 수출증가 산업의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더 높은 근로소득 증가율과 고용안정성을 경험함.
 - 저학력일수록 수입경쟁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하락 정도가 컸으며 저연령일수록 수출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 증가폭이 컸음. 아울러 수입경쟁(수출증가)노출이 더 집중된 직종의 근로자일수록 근로소득의 상대적 감소(증가)효과가 더 빠르고 크게 나타남.
- ▶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조정제도와 고용정책, 중소기업 수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중국 및 베트남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러한 무역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개편과 함께 국내 산업별 그리고 직종별 노동수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총수출 중 대중국 및 베트남 수출 비중은 2000년에 각각 10.7%, 1.0%였으나 2018년에 각각 26.8%, 8.0%에 달하면서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임. 이와 비슷하게 대중국 및 베트남 수입 비중 또한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 각각 8.0%, 0.2%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 각각 19.9%, 3.7%를 기록하게 됨(그림 1 참고).

그림 1. 한국의 대중국·베트남 수출입 변화(2000년 vs. 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https://stat.kita.net>(검색일: 2019. 5. 16).

-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경쟁에 많이 노출된 산업 혹은 직종일수록 고용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대중국 및 베트남 수출 증가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및 직종일수록 고용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다면,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조정비용을 수반함.
 - 예를 들어 수요가 증가한 산업 및 직업군 종사자들은 더 높은 임금 및 고용안정성을 누릴 확률이 높지만 수요가 감소한 산업 및 직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더 높은 실직 및 이직 확률과 그로 인한 임금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대외 및 국내 정책 수립을 위해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를 바꾸는 기제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노동시장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대중국·베트남 무역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무역구조가 크게 변화되었지만 이 변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산업 및 직종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런 고용구조의 변화가 근로자들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포용적 무역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및 노동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한국의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구조의 변화

- 미국과 일본은 각각 과거(2002~04년) 한국의 1위 및 3위 수출국이었지만 최근(2015~18년) 그 순위는 2위와 5위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중국과 베트남의 순위는 각각 2위와 17위에서 1위와 3위로 상승하였음. 한국의 수입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은 각각 과거(2002~04년) 한국의 2위 및 1위 수입국에서 최근(2002~04년) 3위 및 2위 수입국으로 그 비중이 하락한 반면 동 기간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3위, 35위 수입국에서 1위, 8위 수입국으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표 1 참고).
 -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수출입 모두에서 비중이 크게 변화한 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이며, 미국 및 일본과의 수출입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국 및 베트남과의 수출입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해외직접투자는 최근(2015~18년) 미국의 비중이 과거(2000~04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이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증가의 영향이며, 분석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대중국 및 베트남 투자가 대미국 투자를 앞선 것으로 나타남(표 1 참고).
 - 산업별 비중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미국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과 달리 중국 및 베트남 비중은 크게 증가

표 1. 한국의 무역 및 투자 변화

(단위: 억 달러, %)

국가	수출						수입						해외직접투자(순투자금액)					
	2002~04년			2015~18년			2002~04년			2015~18년			2000~04년			2015~18년		
	순위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미국	1	368	18.1	2	697	12.7	2	257	13.9	3	494	10.6	2	9	22.7	1	100	31.0
일본	3	180	8.9	5	268	4.9	1	374	20.2	2	508	10.9	7	1	3.7	14	4	1.4
중국	2	362	17.8	1	1,415	25.7	3	230	12.4	1	954	20.6	1	11	26.8	3	29	8.9
베트남	17	27	1.3	3	392	7.1	35	6	0.3	8	145	3.1	8	1	2.7	5	19	5.9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0. 6. 3)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직접투자통계시스템,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검색일: 2020. 5. 22).

2) 대중국·베트남 무역 변화가 국내 산업 및 직종별 고용에 미친 영향

- 우리나라 제조업 196개 세부산업에 대해 2003~18년 기간 동안 대중국·베트남 무역 충격이 각 산업 고용 변화율에 미친 영향을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 실시
-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p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고용증가율이 0.39%p 감소한 반면 대중국·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p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연간 고용증가율이 0.4%p 상승
 - 주로 섬유, 의복, 신발 관련 제조업과 통신기기 및 영상기기 등이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감소가 큰 산업이었으며, 반대로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반도체, 합금철 등은 수출증가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고용증가율이 높은 산업이었음.
 -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 산업의 일자리가 상당히 감소했지만 역으로 수출증가 산업에서 상당수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이 여타 선진국과 달리 200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반등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
- 고용보험 DB에서 추출한 제조업 분야 130개 직종에 대한 신규고용 자료를 이용해 2003~18년 기간에 대중국·베트남 수출입 노출정도에 따라 직종별 신규고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도구변수를 사용해서 회귀분석 실시
- 직종에 대한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p 증가할 때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4.1%p 감소하였고 반대로 대중국·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p 증가할 때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0.6%p 증가
 - 주로 섬유·의복 관련직, 재료 및 건설 관련직 등이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직종이었으며, 반대로 공학기술자와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기계화학 산업의 경영 관련 사무직 등이 수출증가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도 크게 증가한 직종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저기술 생산직과 경영 관련 사무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
 - 수출증가 산업뿐만 아니라 수입경쟁 산업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노출 산업들이 전체적인 고용 수준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종 구성을 질적으로 변화시켰으로써 기획, 관리, 마케팅 능력을 강화시키고 생산기능의 아웃소싱 및 자동화와 저기술 생산직 고용을 통해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음을 시사

3) 대중국·베트남 무역의 변화가 제조업 종사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

-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산업 및 직종별 대중국·베트남 수출입 충격에 노출된 제조업 근로자 노동시장 결과가 장기간(10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도구변수를 이용해서 회귀분석 실시
- 한 근로자가 종사했던 산업의 향후 10년간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p 높아질수록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1%p 감소한 반면, 해당 산업의 10년간 수출증가노출도가 10%p 높을수록 근로자의 동 기간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수입경쟁 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노출
- 이와 더불어 산업별 수출입 노출 차이가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장기효과는 근로자의 학력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 노출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고학력보다 저학력 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고연령 근로자의 경우에 저연령 근로자에 비해서 종사 산업의 대중국·베트남 수출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했으나, 대중국·베트남 수출증가가 비교적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동년배 근로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용안정성을 누린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가 종사하던 직종의 향후 10년간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p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34%p 감소한 반면, 종사 직종의 향후 10년간 대중국·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0%p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7%p 증가
 - 앞선 산업별 수출입 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직종별 대중국·베트남 수출입 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결과는 수입경쟁 노출로 인한 소득 감소효과와 수출증가 노출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 의 크기가 더 크고 더 빠른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임.

3. 정책 제언

1)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무역구조 변화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보완정책 수립

- 민·관·학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무역구조 변화 현황을 점검하고 전망과 대책을 논의한 뒤에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제도화
 - 중장기적으로 일어나는 무역구조의 변화를 식별하고 또 그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의 충격을 가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적 논의기구 구성 검토
- 이와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
 -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 컨설팅, 세제 혜택, 근로자의 전직·직업훈련·급여·취업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 반적인 수입확대가 아닌 FTA 체결에 따른 수입확대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을 수행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상 FTA 외에도 다양한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무역조정지원제도하에서는 그런 포괄적인 대비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t)나 EU의 EGF(European Globalization Adjustemtn Fund) 등,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보다 그 적용 폭이 훨씬 더 넓은 여타 선진국들의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참고할 필요

2) 근로자 수준에서의 맞춤형 통상보완정책 강화

- 무역조정지원제도로 대표되는 현재 우리나라의 통상보완정책은 근로자 개개인보다는 기업 수준의 지원에 대 부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TAA가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근로자 TAA에 사용하는 것 이나, 유럽의 EGF가 실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운영 방식임.
 -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무역자유화정책 도입으로 인해 생긴 피해를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지만 이것이 지나칠 경우 한계 산업 혹은 기업 의 존속을 연장함으로써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과정을 방해하는 부작용 을 낳을 수 있음.
- 무역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양 산업 및 직종 근로자들의 전직 및 이직을 돕고 그 과정에서의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상보완정책을 강화할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나 직업훈련정책이 무역조정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혹은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취약 근로자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통상보완정책의 효과성 제고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취약계층에서 무역구조 변화의 부정적인 효과는 더 크게, 긍정적인 효과는 더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취약계층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요건을 더 완화하고 지원 내용과 강도를 더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를 통해 우리나라 통상보완정책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높여야 함.

3) 직종별 고용 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지원정책 강화

● 무역구조 변화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 수준 분석 외에 근로자 직종 수준 분석도 병행할 필요

- 이론적으로 산업 수준에서의 무역충격보다 직종 수준에서의 무역충격이 근로자의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이고 클 수 있음.
- 실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산업 수준에서의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 노출정도보다 직종 수준에서의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소득증가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평균적으로 더 크고 더 빠른 속도로 실현되었음을 확인

● 무역충격으로 인한 고용 변화를 산업 수준에서만 파악했을 때보다 직종 수준에서의 무역충격 효과까지 함께 고려할 때 이 정보를 기존 고용안정화정책과 연계함으로써 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고용안정화정책을 수립·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 산업 및 직종별 고용 상황 모니터링과 전망에 대한 정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정책과 고용유지정책 등의 효과성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목에서 유망 업종과 직종을 선정하고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미래 부가 가치와 노동수요가 높은 부분에서 근로자들이 인적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자체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필요

- 현재 정부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사업이나 일·학습 병행제와 같은 전문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지만 그 예산과 시행범위 등이 다른 고용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및 직종별 커리큘럼의 적실성과 체계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들의 참여도와 인식을 제고해야 하는데, 이것은 관·학·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하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인력과 시간,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과제임.

4) 중소기업 중심의 업종 및 국가별 특화 수출 지원정책 확대

- 장기적으로 해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 지원정책을 확대함으로써 해당 산업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중국 및 베트남 수출(수출증가노출도)이 증가한 산업에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및 시간당 소득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도출
 - 구경현 외(2019)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에 힘입어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
 - 우리나라 총고용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딘 현상이 지속된다면, 무역이 증가할수록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음.
- 효과적인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서 일률적인 지원정책보다는 기업의 특성과 업종, 수출상대국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 비중을 크게 확대할 필요
 - 2000년대 이후 활발한 FTA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에 대한 평균 수출 관세율은 많이 낮아졌으나,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중소기업 수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기후·환경·인권과 관련된 신통상규범의 도입, 메가 FTA의 본격화 등 무역 환경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출 중소기업은 이전보다 더 복잡다단한 애로사항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 기존 정책의 취지는 큰 틀에서 유지하되 지원 방법과 시기, 지원 범위와 내용 등을 지원대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담당 실무자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참여 기업 및 현장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feedback)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
 - 포지티브(positive) 방식보다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사후 정책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 **KIEP**